

# 흥행 가도 민주 경선... 신경전도 가열

### 각 캠프 선거인단 모집 경쟁 신청자 50만명 넘어서 ‘역선택 논란’ 지지자간 설전 후보토론회·개표방식도 이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간 선거인단 모집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토론회 일정과 경선룰 등을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 펼쳐지는 분야는 선거인단 모집이다. 모집 일정이 20일 오후 5시 현재 50만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 지정 기준 약 39만명에서 이날 하루에만 10만명 이상이 늘어난 배경에는 신청 절차가 편리해진 점이 작용했다.



‘주간 문재인’ 공개촬영 현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주간 문재인’ 6탄 공개 촬영을 하고 있다. ‘주간 문재인’은 문 전 대표가 직접 출연해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는 동영상이다. /연합뉴스

전날까지는 유료인 범용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무조건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자가 폭주해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자 민주당은 콜센터 번호도 신선했다. 기존의 콜센터 번호인 1811-1000번은 상담원 직통이며, 새로 추가된 1811-1004번은 ‘보이는 ARS’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추세로 선거인단 신청자가 늘어날 경우 민주당이 목표로 내세운 200만 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청전화가 폭주한 탓에 안내를 하느라 콜센터 상담원들의 손이 마비될 정도”라며 “오늘부터는 ARS 접속 가능한 전화번호를 하나 더 늘려 선거인단 모집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선거인단 모집 열기가 가열되면서 각 캠프는 SNS를 통해 참여 안내

메시지를 퍼뜨리면서 “우리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경선이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지자를 선거인단으로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경선 승리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선 분위기 속에 ‘역선택 논란’을 두고 지지자들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 다른 정당 지지자가 경선에 참여해 일부러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안희정 충남지사 측 지지자들은 중도·보수층의 참여를 무조건 역선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안 지사

지지자 중 일부는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중도·보수의 지지를 받는 안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역선택 경계 프레임’을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보 간 토론회를 언제 여느냐도 쟁점이다. 안 지사 측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가능한 한 빨리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인데, 예비후보들끼리 공개석상에서 난타전을 벌이는 것이 어떻게 비정당적”이라며 후보자 간 토론 시기를 최대한 미뤄보자는 모양새를 취했다.

마무리된 것으로 여겨졌던 경선룰에 대해서도 일부 후보가 조정요청을 하면

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투표소 투표 결과를 순회경선 첫 장소인 호남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후보 측은 “호남 순회경선에서는 호남지역에서 이뤄진 투표소 투표만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야 지역별 표심 왜곡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당 선관위 양승조 부위원장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며 발표방식 변경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문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안희정 ‘박근혜 선한 의지’ 발언 논란

### 文 “분노 있어야 정의 바로 서”...손학규 “억지스럽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른바 전직 대통령의 ‘선한 의지’ 발언을 놓고 20일 야권 내에 파문이 일었다.

안 지사가 전날 부산대에서 열린 ‘즉문즉답’ 행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누구라도 그 사람의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받아들이려 한다”며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즉각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고 이에 안 지사는 강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어법적 비유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으로 국민과 함께 뜻을 든 제가 그들을 비호하다니요”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 지사의 발언에 대한 논란은 이날 더 확산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YTN 라디오

출연, “박 대통령이 그런 혼란, 자질이 부족했었다는 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며 가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서울 중랑구 보건안전교육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에게는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과”라며 “그 결과를 제대로 만들 책임이 정치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날 서울 마포 한 스튜디오에서 한 ‘주간 문재인 6탄’ 공개촬영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지사의 말에 분노가 담겨있지 않고 빠져있다. 분노는 정의의 출발이며, 불

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있어야 정의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SBS 라디오에 출연, “우리가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데, 청산해야 할 상대, 책임져야 할 상대까지 손을 잡아버리면 새로운 변화가 절반의 성공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계속되지 않 지사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본인께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고 자부 변명을 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야, 특검 연장 놓고 정면대치

### 야 “연장안 처리 모든 방법 강구”...여 “강행처리 막겠다”

여야가 20일 ‘환노위 사태’에서 비롯된 다섯간의 국회 파행을 끝내고 상임위 일정을 정상화했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20일 여야가 정면으로 대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에 관한 4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전일 합의를 추진, 이날 예정된 7개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렸다.

하지만, 더 큰 쟁점인 특검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는 이날 강하게 충돌했다. 야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안 수용할 것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여의치 않을 때 23일 본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장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과 국회는 황 대행의 침묵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현재 발의된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원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야 4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 나와 “4~5개월 이상 특검이 연장되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당장 30일은 분명히 연장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이 실제로 직권상정을 통한 특검 연장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직권상정의 결정권을 헌정재판관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이다. 또 야권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재난이나 긴급사태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지금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연장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한편, 야권의 강행 처리 시도에 결연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직권상정 3가지 요건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된다. 천재지변, 전시도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직권상정은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다시 기지개 켜는 민주 개헌파

### 개헌초선모임, 당내 의견수렴 요구... 오늘 귀국 김종인 행보 관심

더불어민주당 비문(비문재인) 개헌파 의원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나섰다. 당내 경선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개헌 논의가 동력을 잃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개헌초선모임에 참여한 의원 중 최윤열·김성수·박용진·김병욱·최명길·정준숙·김태식·임종성 등 8명은 20일 오전 국회 개헌특위 간사인 이인영 간사와 면담하고 개헌 논의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 지도부가 개헌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의원총회를 소집해 개헌 관련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에서 선출하는 대선 후보자가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 수 있도록 개헌특위 차원의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국민의당 등은 자체 개헌안까지 마련하는데 우리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과 공유 과정이 없으니 개헌특위가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번 주가 당내 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에 불을 댕기는 시

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는 우상호 원내대표와 이인영 의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개헌특위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또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민주당 개헌특위 의원들이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초선 의원들의 의총 요구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앞으로 매달 회의를 열어 당내 의원들의 개헌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자체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개헌을 빨리 하자는 분들은 답답하겠지만, 개헌이 흑시 전략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분들은 불편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개헌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물론 4박5일간의 독일 방문을 마치고 오는 21일 귀국하는 김종인 전 대표의 정치적 선택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비문 계열이 최근 안 지사를 지원하려는 행보가 감지되고 있어 개헌을 고리로 비문계열과 김 전 대표가 새롭게 ‘조합’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

## 경매/매매

---

### 풍암동 중심 상가

매매가격 1,650,000,000

서구 동천동 공장 창고	서구 매월동 상가 사무실	문화의전당 옆 오피스텔	중흥동 상업지역 토지
 대지 370평    최저가 681,578,000 건물 97평    감청가 1,217,104,900	 대지 261평    최저가 1,450,531,000 건물 458평    최고가 2,072,187,000	 대지 215평    최저가 1,492,071,000 건물 467평    감청가 2,131,071,000	 대지 612평    최저가 2,126,985,000 감청가 3,038,985,000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화정동 상가사무실	운정동 기전빌라	제일오피스텔 29층
 대지 91평    최저가 425,000,000 건물 340평    최고가 948,794,100	 대지 48평    최저가 382,407,650 건물 160평    감청가 382,407,650	 22층형 6가구 (수역성 어주동음)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차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청가격 9,000만원 금 매매 6,2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경매컨설팅  
초보자 00명 모집 062)232-9994

010-3070-2147

유 여사